

# 2025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다시:ON - AI로 예측하고, 데이터로 설계하는  
지방소멸 대응 플랫폼사업

2025.08



## 2025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과제명	<b>다시:ON – AI로 예측하고, 데이터로 설계하는 지방소멸 대응 플랫폼 사업</b>			
사업목적	충북지역이 보유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AI기반 스마트 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확산하여,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사업기간	2025년 08월 ~ 2026년 07월 (1년간)			
사업비	총20억원 (국 10억, 지 10억)			
참여지자체	<span>개발/구축</span> 충청북도, 제천시 <span>실증</span> 울산광역시			
사업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b>LLM기반 도민서비스 제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LM기반이용자에대한대화형학습서비스구축</li> <li>- 이용자에게AI기반지역이주 및 정책관련 맞춤형 정보제공</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b>AI기반 정책서비스 제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LM기반의사전정책시뮬레이션 서비스제공</li> <li>- AI를 기반으로 생활인구 기반 분석, 정책 수립 및 가이드 제공</li> </ul> </div> </div>			

## 충북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 응급의료 데이터 기반 안전지도 서비스



## 충북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 도시침수 상황 사전 예측 분석 서비스



충북 및 실증 대상 지역의 도시 문제 - 인구감소 및 유출, 고령화 등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

## 인구 유출 완화 및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제거 기여



데이터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대민 서비스

AI기반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 인구유출 및 감소 추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봉착

#### 충청북도



- 지역간 불균형
- 인구감소/고령화
- 도시쇠퇴
- 인력유출 심화
- 자연재난 증가

#### 제천시



- 인구유출 및 감소심화
- 고령화 지속증가/청년층 감소
- 도시내 지역간 격차 발생
- 정주여건 열악
- 농업 및 중심상권 쇠퇴

#### 울산시



- 인구유출 및 감소심화
- 정주여건 열악
-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
- 원도심의 경제적 쇠퇴 심화
- 문화 컨텐츠 부족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관련 문제는 범부처적으로 대응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li><li>-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25~34)</li><li>- 제2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3~32)</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1-25)</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1기인구정책 TF(2019)</li><li>제2기 인구정책TF(2020)</li><li>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전략(2021)</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3~27)</li></ul>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22~26)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방안

비전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목표	성과지표	성과평등하고 평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업 예산	
주 제 전 략				
	1. 점액 밀이고 점액 흘리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두가 누리는 위생的社会</li> <li>□ 성장통제적 일할 수 있는 사회</li> <li>□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 아동·청소년의 체육·건강 증진</li> <li>□ 생애 전반 성장·성장산권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수준 있는 노후생활보장체계</li> <li>□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li> <li>□ 자녀세대 계획 수립 위한 통합법률 플랫폼</li> <li>□ 고령화정책 주관부처 통합</li> <li>□ 혼인한 삶의 마련과 지원</li> </ul>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역량창출 2층 청정의 천재 육성</li> <li>□ 평생교육 및 창업 지원 강화</li> <li>□ 청년기 살림 기반 강화</li> <li>□ 여성의 경제우위 및 성장기반 강화</li> <li>□ 산신주의 유품목과 물가인 할·사회복지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li> <li>□ 연금체계 시장 운용비</li> <li>□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li> <li>□ 지역상생 기반 구축</li> <li>□ 고령화환경체계로의 도약</li> </ul>		
주 제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중앙부처·자치체 시행계획 수립</li> <li>□ 중앙·자치체 연구·운영·공동대응 협력체계 운영 등 중앙·자치 거버넌스 구축</li> </ul>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노인일자리,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2023년 대비 202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규모 변화**

2023년  
2027년

노인일자리  
10%

노인 인구  
37%  
63%

노인 일자리  
40%

노인 인구  
10%  
60%

**1.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 ▶ 2020년 대비 2027년 노동시장 진입 확장
- ▶ 노인일자리 낙관도 더 높아
-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로 노인 일자리 신설 강화
- ▶ 노인일자리 지원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2.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 ▶ 2020년 대비 2027년 노동시장 진입 확장
- ▶ 노인일자리 낙관도 더 높아
- ▶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 ▶ 노인일자리 지원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3.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 ▶ 노인일자리 지원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4. 노인일자리 지원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 ▶ 노인일자리 지원 확장으로 노동시장 진입률 확장

비전과 목표	
비전	농업이 밝아지는 귀농, 농촌이 절어드는 귀촌
목표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 강화로 농업생산·귀농생활 만족도 향상
귀농인 10만명 규모로 고도화율을 증가 목표 달성을 : (2) 88% ~ (26) 95%	
귀농 가구 세대 만족도 향상 : (21) 76.2% ~ (26) 85%	
5대 추진전략 1회 추진 결과	
1 거주지 인구 축소현상 사관화로 크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도시화로 농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귀농귀촌 준비 지원</li> <li>②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지원</li> <li>③ 거주 지역의 커뮤니티 지원</li> </ul>
2 귀촌인의 취향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지 주변 활동과 활용방법 지원 확대</li> <li>② 지역 내 주민과 청년과 함께 페어</li> <li>③ 농어촌, 시장작과 같은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li> <li>④ 지역 내 주민과 함께 청년과 함께 활동방법 지원</li> </ul>
3 귀농인의 영농활동 넓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 내 주민과 청년과 함께 청년 단체로 지원</li> <li>② 지역 내 주민과 함께 청년 및 농업기기 마련</li> <li>③ 친환경 양식 및 농작물 지원</li> </ul>
4 농촌다문화를 유지하는 기후·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거지 주변 자연환경 개선 및 계획 확대</li> <li>② 동양화·고지대 벌목제 면제 등 농촌 환경 지원</li> <li>③ 농촌 간접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조 체계</li> <li>④ 다양한 주제 모임 운영</li> </ul>
5 귀농귀촌 <u>권익증진</u> 통한 통합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귀농귀촌 단체와 개인 정보 제공을 활용하는 구조화</li> <li>② 경제·부자·기력·건강 관리와 유통망 운영 협조화</li> </ul>

충북 및 실증 대상 지역의 도시 문제 - 인구감소 및 유출, 고령화 등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

## 충청북도 및 제천시는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소멸위험지수 기준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수립/  
AI서비스  
제공 필요

지역명	인구감소/지방소멸 지역	지역명	인구감소/지방소멸 지역
강원	12개 시군	전남	16개 시군
충남	9개시군	경남	11개 시군
충북	6개 시군	부산	3개 구
경북	15개 시군	대구	3개 구
전북	10개 시군	인천	2개 군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전국	45,858,029	47,732,558	48,792,274	50,515,666	51,529,338	51,829,023	51,459,626
충북	1,439,346	1,497,513	1,488,803	1,549,528	1,583,952	1,600,837	1,595,578
비중	3.14%	3.14%	3.05%	3.07%	3.07%	3.09%	3.10%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2년			
충북	1,549,528	1,583,952	1,600,837	1,595,578			
제천	137,264	136,138	133,018	130,988			
비중	8.86%	8.59%	8.31%	8.20%			

충북의 인구는 2020년까지 증가 추세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 인구수 : 1,590,735명 (2025년 4월 기준)

\* 인구감소 기초지자체 : 단양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제천시, 괴산군  
본사업 대상지역인 제천은 2010년 이후 인구가 지속 감소 상황

\* 2025년 4월 기준 128,708명

영유아 및 청년층은 지속 감소, 중장년 및 노년층은 증가 추세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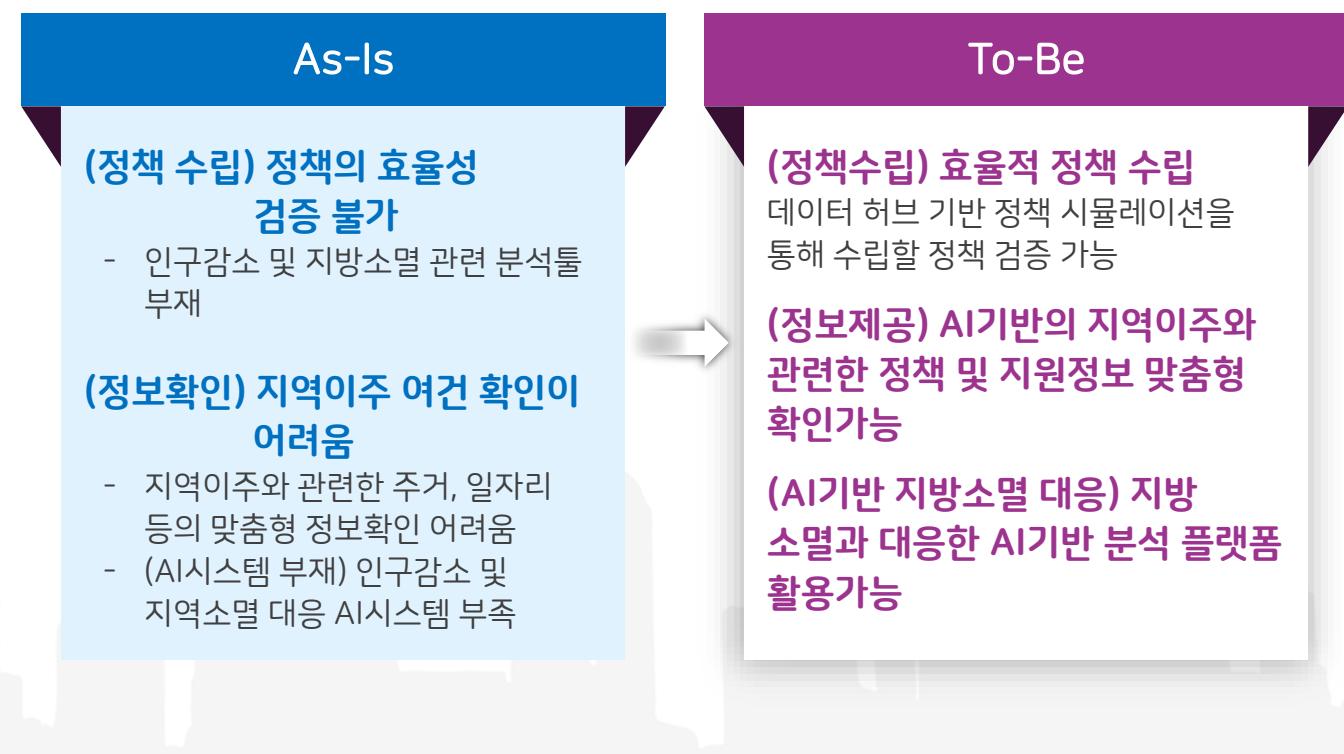
최근 설문조사(2024, 충청북도 대상지 거주 청년 200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72%가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환경 부족'을 주요 전출 사유로 꼽았고, 59%는 정주를 위한 생활 인프라 정보 부족을 지적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은 양호(제천시 93%)\*\*하나, 실시간 데이터 연계율은 15% 미만에 불과하여, 교통, 복지, 유동인구 관련 스마트서비스 구현에 한계

충북은 데이터허브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고 확산하기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

**충청북도는 인구소멸과 관련된 국내 공통 문제를 인식하고,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AI와 데이터기반의 정책 시뮬레이션 및 대민 서비스 제공 솔루션을 통해 인구소멸 완화 기여**

	<b>1-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기구축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 서비스, 도시침수 예측 서비스</li> </ul>
	<b>2-데이터 허브 확산의 용이성 및 접근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중심에 위치, 항공, 철도, 도로등의 용이한 접근성</li> </ul>
	<b>3-기 스마트시티 조성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교통, 생활</li> </ul>
	<b>4-다양한 사유의 인구 감소 지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 이탈, 지역간 불균형, 도시쇠퇴, 인구 고령화 등</li> </ul>
	<b>5-다양한 혁신기관이 위치하여 공공데이터 확보 용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자체 출자/출연, 비영리법인 등 32개 기관 위치</li> </ul>



생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정주지원 생태계 구축으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실현

## 스마트 생활인구 기반 지방소멸 대응 서비스

### 단계별 실행 전략 1단계

#### 데이터 확보 및 분석기반 구축

- 생활밀착형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 ✓ 유동인구, 인프라 접근성, 주거·상권·복지 데이터 확보
- ✓ 지역 기반 생활인구 분석 알고리즘 설계

### 2단계

#### 스마트 분석·AI 기능 개발

- AI 기반 정주환경 예측 및 정책 타깃 추출
- ✓ 생활인구 시계역 분석, 정주 점수 산정 모델 구축

### 3단계

#### 사용자 중심 서비스 실증

- 시민 및 행정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
- ✓ '내 마을 추천', 'AI 생활리포트', '정책 제안 시뮬레이터' 등 서비스 제공
- ✓ 사용자 피드백 반영 및 고도화

### 4단계

#### 성과 공유 및 타 지자체 확산

- 도내 타 시군 확산 및 전국 제안
- ✓ 성과보고서 및 확산 매뉴얼 작성
- ✓ 충북 도청 및 중앙부처 대상 정책연계 설명회 개최

광역권 내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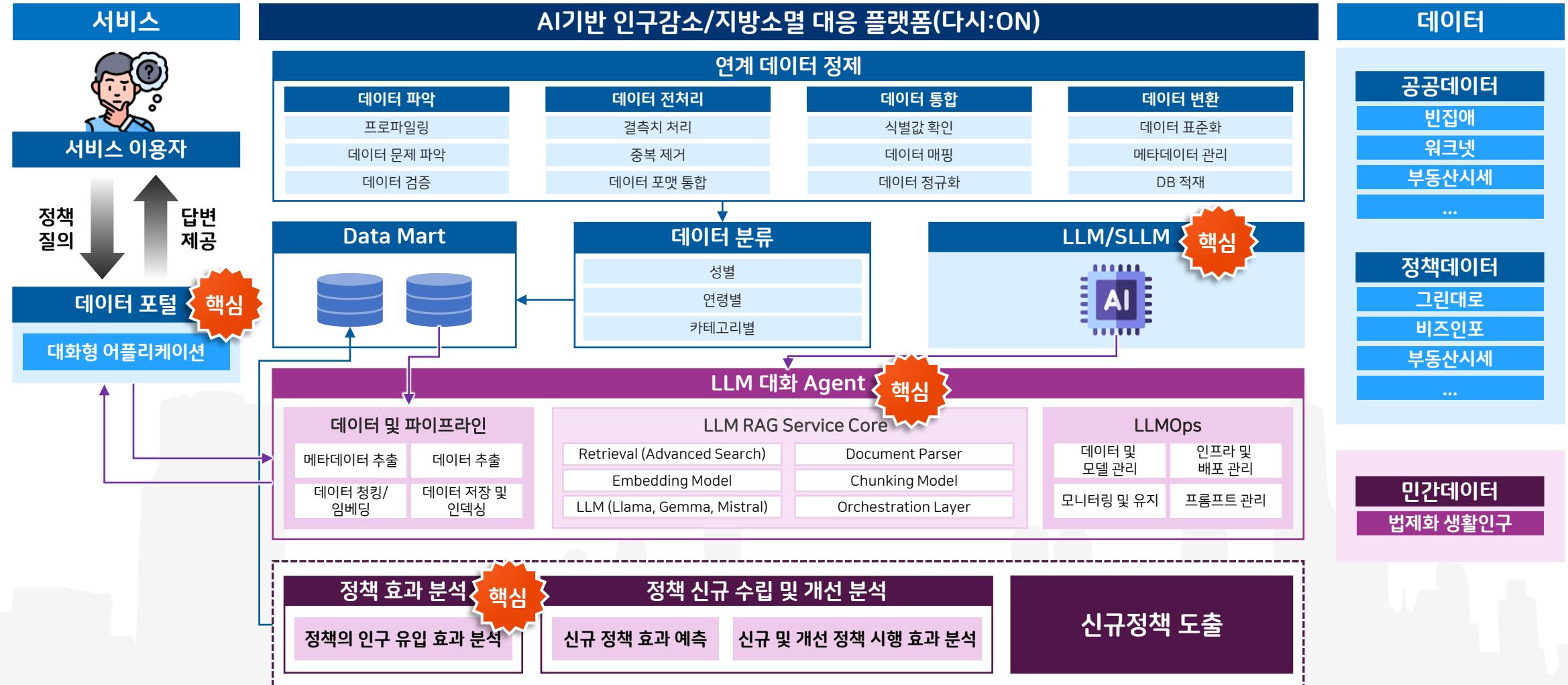
광역권 외부 연계

전국적 확산 기반 구축

## 시범솔루션 특장점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	범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기반	AI 기반 예측 및 자동화 기능 탑재	정책 설계 지원 및 대시보드 제공	보안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 설계	광역 및 타 지자체 확산을 고려한 구조
청년, 고령자, 소상공인 등 대상별로 필요한 정주·생활 정보를 모바일 기반 UX/UI 및 음성지원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선별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확보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여 전국 확산 및 유사도시 적용 용이	생활인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정주환경 점수 예측, 정량 기반 창업 입지 추천 서비스 등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실효성 있게 통합 적용	정책입안자용 모듈을 통해 행정 담당자는 소멸위험 진단, 정착 유도 대상군 추천, 상권 밀도 분석 등 통계 기반 정책 수립 지원 가능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반 데이터만 처리하며, 정착추천 등 민감정보는 로컬 저장 구조, 접근권한 기반 관리체계 적용	시군구 단위 데이터 구조를 모듈화·템플릿화하여 확장 가능성 확보, 충북 내 인접 시군 및 전국 소멸위험 지자체로 범용 이전 용이

## AI기능을 핵심으로하는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구조



## 데이터허브 플랫폼의 수집 및 생성데이터, 활용방안



## LLM, AI기능을 내재하는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 허브 기반  
기준 솔루션 대비 혁신성 및 차별성

## 기준

교통, 환경, 방범 등 물리적 인프라 중심의 도시 문제 해결에 집중

## 시범솔루션

- ✓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의 인구 정착이라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중심
- ✓ 지방소멸 대응, 청년 유출 방지, 고령층 정착 지원 등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 ✓ 공공데이터+AI 예측 분석 결합으로 시민 체감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실현

데이터 기반  
유사 솔루션 대비 차별성

## 기준

민간 주도의 위치·상권 분석 플랫폼

## 시범솔루션

- ✓ 전국 공공데이터 기반 구축으로 민간 데이터 의존도가 낮고 보안성과 확장성이 우수
- ✓ 지역 정주환경 스코어링 및 맞춤형 이주지/정책 추천으로 고도화된 기능

## 실현가능성

##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및 인프라 기반 연계

- ✓ 제천시는 이미 공공데이터 개방률이 각각 93% 이상으로 행정정보·정주시설·생활시설 위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충청북도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계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AI 기술	적용 기능	설명
LLM	대화식 서비스	✓ 대화식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및 정책 분석 서비스 제공
시계열 예측 (LSTM 등)	생활인구 변화 예측	✓ 시간대·요일·계절에 따른 지역별 유동인구 및 체류인구 변동 예측을 통해 상권 수요, 정주환경 변화 감지
지도학습 기반 분류 모델 (XGBoost, LightGBM 등)	정책추천 및 창업입지 추천	✓ 정주환경, 상권, 인프라 접근성 등 다변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 맞춤형 지역 추천
클러스터링 및 군집 분석 (K-Means 등)	정책 수요자 자동 선별	✓ 지역 내 고위험 고립가구, 정주가능 청년군 등 유사 특성 기반 집단을 식별하여 정책 타깃 제안
설명가능한 AI (XAI)	행정대시보드 설명 기능	✓ 정착 점수 또는 추천 결과에 대한 AI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여 정책입안자에게 투명성 제공

## 데이터허브에 축적된 공공데이터와 민간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모델 운영

시범솔루션 주제의  
차별성공공데이터 기반의  
확산 가능성기 구축된 인프라와의  
연계성AI를 통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 구축된 플랫폼의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 - 대민 서비스 및 정책 수립 부문

## 활용 시나리오1

청년 귀촌 정착 지원  
- "어디로 이사할까?" -

**대상** 충청북도 외 지역에서 이주를 고려하는 30대 청년 A씨

창업을 고려하던 중 '내마을AI' 서비스에 접속하여 정착 가능한 마을 탐색

## 활용흐름

- A씨는 자신의 직업, 선호 조건을 입력
- 내 마을 AI는 생활인구 흐름, 창업 적합지, 인프라 접근성, 정책지원 보호 정보를 분석해 상위 3개 지역제시
- A씨는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금, 주거 보조금, 공공시설 정보를 함께 열람
- QR 코드로 지역별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예약 가능

## 활용 시나리오2

고령자 돌봄정책 타깃 선별  
- "위험가구를 빠르게 찾자" -

**대상** 기초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고령자 돌봄 서비스 우선 대상자를 선별해야 함

## 활용흐름

- 내 마을 AI가 생활인구 기반 데이터를 분석해 고령 1인 가구 중 최근 7일 이상 외출 없음 + 인근 의료기관 미접속 기록보유 가구 자동 분류
- 해당 가구를 복지 지도상에 표시해 복지공무원에게 알림 전송
- 돌봄 서비스 우선 대상자로 지정 후, 현장방문 및 시설연계

## 활용 시나리오3

소상공인 창업 지원  
- "어디에 가게를 낼까?" -

**대상** 제천시 내 예비 창업자(자영업 희망자)

상권이 포화되지 않은 지역을 찾아 창업하려는 사용자

## 활용흐름

- 내 마을 AI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창업 희망 지역 범위 지정
- AI가 생활 인구 흐름, 경쟁업체 분포, 임대료 수준, 인구 소득수준 등 기반으로 창업 유망지역 추천
- 추천 지역의 상권 밀도, 시간대별 유동인구 시각화 제공
- 창업 관련 정책(청년몰, 간판교체 지원 등) 자동 연결

## 활용 시나리오4

정책 수립 지원  
- "데이터로 정주대책 만들자" -

**대상** 충청북도청 정책기획관

도내 소멸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년정착 전략 수립

## 활용흐름

- 내 마을 AI에서 제천시, 증평군의 정주환경 요인을 비교 분석
- AI가 생활인구 추세, 청년 유출 경로, 인프라 편차 등을 분석하여 정책 타깃 제안
-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청년 정착 유형(창업형, 직장형, 생활복지형) 분류 결과 제공
- 분석 결과를 도 종합계획 및 국비 신청 보고서에 반영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정주 판단을 도와 지방이주 실현 가능성 증가
- 이주 대상지 선택의 정보 격차 해소

- 고립 고령자 조기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복지 행정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 수용기반 창업유도 → 생존율 제고
- 창업 정책 연계로 정책 이용률 증가

-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체계화
- 타 지역 확산 가능한 모델로 정책 일관성 확보

## 생활인구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문제 해결 데이터허브 기반의 정책·산업 연계 생태계 확산으로 행정 효율성과 민간 활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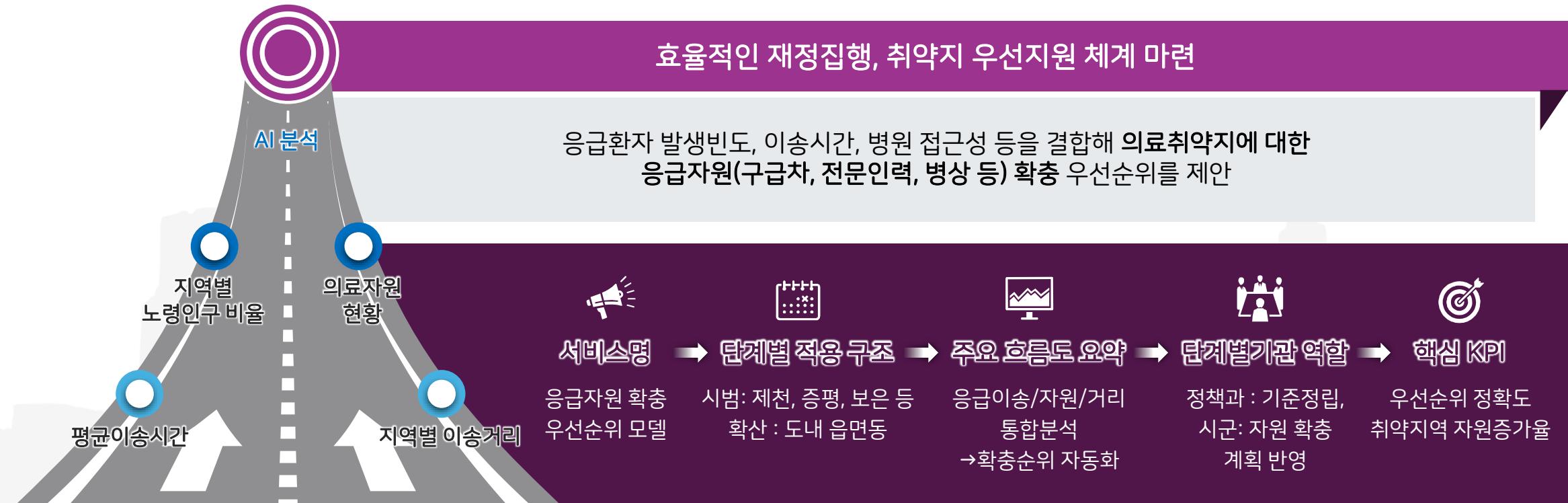
도시지역 문제 해결	AI 분석을 통해 지역정착 유도, 상권회복, 복지 수요 대응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	정주·이주 촉진 및 주민 체감도 향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지역 선택·이주·정착을 촉진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와 신뢰도 제고
행정 의사결정의 데이터 기반 전환	정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타깃 설정과 우선순위 선정 가능 및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투명성 향상	AI 기반 스마트행정 실현	AI 기술을 실제 행정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행정 대응속도·정확도 향상, 인력·비용 절감 등 스마트 행정 기반 마련
광역권 및 타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	공공데이터 기반 범용 설계로 타 지자체로 쉽게 이전·확장 가능한 시범모델 확보 및 타 분야 사업과 연계하여 디지털 SOC 확장성 확보	정책 선도성과 중앙 확산 기반 마련	중앙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및 스마트도시 통합 데이터 정책과 연계 가능

### 시범솔루션 확산 기대효과

기술 확산 기반 확보	행정·정책 연계 확산 전략	민간 및 산업계 확산 방안
<p><b>모듈형 구조 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수집·AI분석·대시보드 등 재사용 가능한 기능 단위로 구성하여 타 지자체 적용 용이하게 설계</li> </ul> <p><b>API 기반 인터페이스 제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표준 RESTful API 공개, 타 기관 연계 확장성 확보</li> </ul> <p><b>플러그인형 정책 시뮬레이션 설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유형별 정책 모듈을 탑재해 지역별 선택 적용 가능 구조 채택</li> </ul>	<p><b>생활권 단위 협력모델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천·단양·충주·영월 등 인접 시군과 공동 생활인구 흐름 분석 및 공동 정책 실행</li> </ul> <p><b>지자체 맞춤형 도입 가이드 배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규모, 데이터 수준, 행정 역량 등에 따른 적정 도입 모델 설계 및 매뉴얼화</li> </ul>	<p><b>데이터기반 창업 모델 유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청년창업자, 데이터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인구 기반 창업모델 확대</li> </ul> <p><b>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돌봄, 청년귀촌, 관광연계 등과 관련한 B2G/B2B 민간 솔루션 연계 가능성 제시</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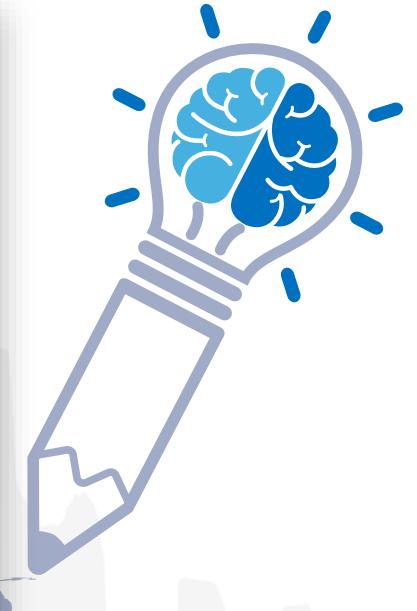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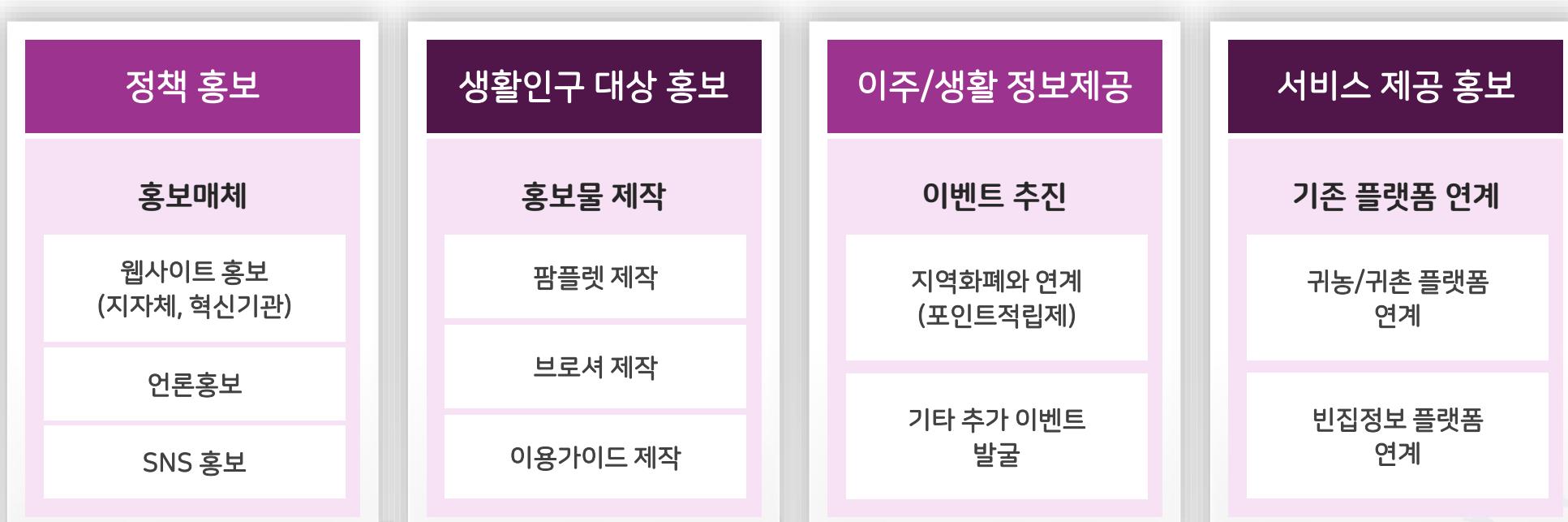
기 데이터허브 플랫폼의 고도화 방향 –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 응급의료 취약지역 중심 응급자원 확충 우선순위 자동 도출 시스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수행으로 우수 활용사례 발굴 및 확산 유도

## 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용 사례 발굴 / 서비스 이용율 증대 / 전국확산



# 06 솔루션 확산방안

## 단계별 확산 추진 및 중점사항

### 확산 단계



광역간 연계 가능한 높은 호환성, 넓은 확장성을 가진 데이터허브 솔루션 구축

### 공인 시험 및 인증 취득

### 확산 중점

### 4대 전략

#### 개방형 아키텍처

- 개방형 API 도입
- 오픈소스 활용
- 표준 프로토콜 준수
- 확장성 확보

#### 기술적부문

- 일관성 있는 데이터 구조
- 표준 보안기준 준수
- 모듈형 설계

#### 운영적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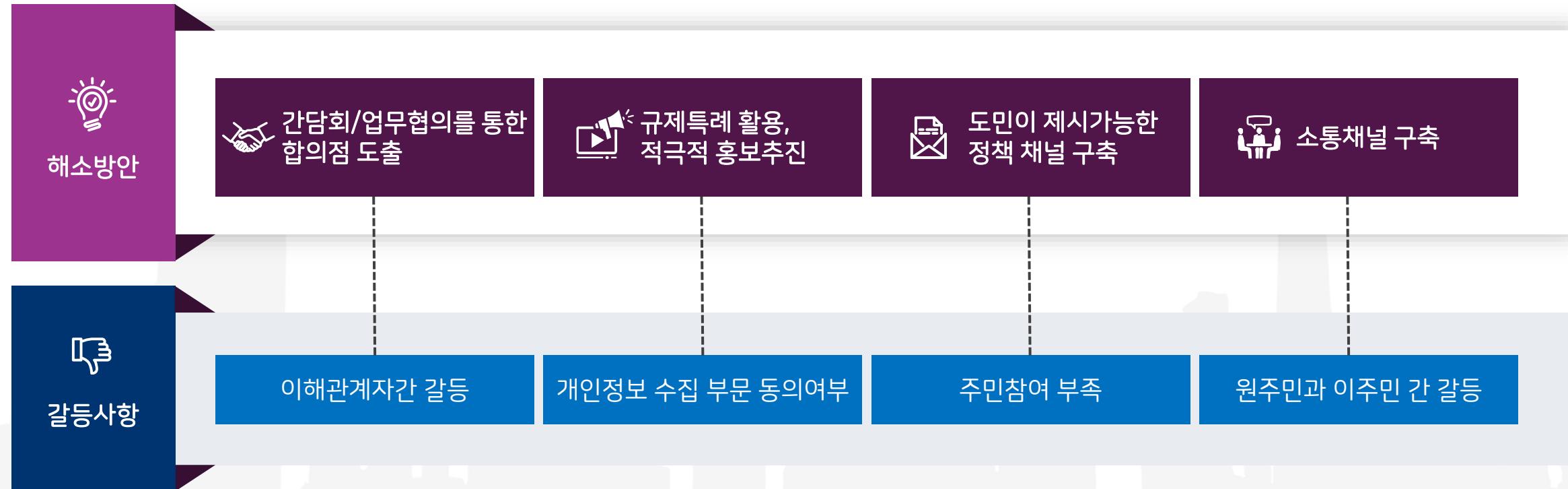
- 표준 매뉴얼 제작
- 공통 모니터링 기능
- 자동화 체계 도입
- 체계적 업데이트 도입
- 피드백 체계 구성

#### 인터페이스

- 표준적 UI 활용
- 인터페이스 통일
- 상호 운용성 고려

데이터허브 플랫폼 구축 및 확산시 발생가능한 갈등 발굴 및 해소 방안 모색

## 적극적인 갈등해소책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수단으로써의 기여



# SMART CITY

Smart Grid & Internet of Things



Industry



Building



Transportation



Energy



Logistics



Medical



House



데이터허브 기반 지방소멸 대  
응  
충청북도가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